

제주형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용두사미’

핵심분야 ‘후방산업 활성화→충전서비스’로 전면 수정
기존 계획과 차이 없어 ‘과감한 규제개혁’ 취지 무색
제주도 “기존계획 연계 중요... 2차심의에 우선 집중”

제주형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마련된 수정 계획을 보면 당초 준비한 혁신 계획들이 대부분 빠지고 ‘충전 서비스 분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지난 5월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후 2차 심의에 맞춰 전면 수정됐다.

1차 협의 때 마련한 사업계획안을 보면 제조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세부사업에는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 및 이용편의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 ▷3D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분산형멀티충전 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x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1차 심

의를 넘지 못했다. 전기차 제조산업 조성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정부의 컨설팅을 받으며 대부분의 계획들이 폐기됐다.

수정된 계획에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접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간이 진단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명칭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변경됐다.

하지만 수정된 계획은 이미 제주도 수립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수정 계획이나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 수정계획(2018-2030)’ 등에 일부 포함돼 있다.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ICT와 충전인프라 연계사업 ▷공공주택 내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등으로 매우 유사하다.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취지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심사 조건”이라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에도 다른 분야로 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2차 우선협의 대상자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안 요약서 등을 제출했다. 2차 우선협의대상자 심의는 9월 초쯤 열릴 예정이다. 이소진기자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사업 본격화

내년 예산 6억5400만원 규모
치유센터 건립계획 초석 기대

내년부터 제주에서 정부 지원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제주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해 운영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는 신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제주와 광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는 것이다. 예산은 총 9억원이 계획됐다.

이 중 제주에는 국비 3억2700만원

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비와 매칭하면 총 6억540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제주도 ‘4·3복합센터’ 건립 계획과 정부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계획의 초석이 될 수 있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7기 공약으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담당하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기능을 포함한 4·3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올해 초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타당성 조사와 광주에 각각 위탁·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 동부지역 지하수도 ‘위태’

토양·지질학적 특성과
오염원 증가로 위험 ↑
질산성질소농도 급증세

제주 동부지역도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하수 오염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분뇨와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등으로 서부지역의 지하수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부지역에까지 오염이 우려되면서 제주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연구원 박원배 선임연구위원이 화학비료 등 지하수 오염원 증가에 따른 동부지역 지하수 수질 오염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좌읍 지역의 질산성질소 평균농도는 2014년 3.0mg/l 수준에서 2018년 4.0mg/l를 넘어서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부지역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증가 원인은 토양·지질학적 특성과 오염원 증가 등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이 서부지역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지하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청정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토양·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비료사용량 증가와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으로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박원배 선임연구위원은 동부 지역의 청정한 지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동부지역 대규모 임대농에 대해 토양검정 시비 및 적정 비료사용량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점과 지금까지 시행해 본 적이 없는 토양-지하수를 연계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상윤기자

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제주도, 특별 감시·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20일까지 3단계로 추진되며 도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6개팀이 참여한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시설은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을 운영해 야산 및 공한지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함께 양돈 약취배출 시설에 약취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가을의 문턱... 피서객 떠난 해수욕장 어느새 가을의 문턱이다. 창문을 넘나드는 바람에도 선선한 기운이 묻어난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9일 빈 파라솔·의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함덕해수욕장의 풍경이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강희만기자

제주 1인가구 30%... 외국인 인구도 급증세

201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제주지역 가구 10곳당 3곳은 1인 가구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만6000가구로 2017년에 견줘 3.9% 늘었다. 세종(13.9%)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인 가구 비중은 29.4%로 2000년 16.6%에서 2005년 21.5%, 2015년 26.5%, 2017년 28.6%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도 1만6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1000가구가 늘었고, 전체 가구 중에서 6.4%를 차지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크게 늘었다. 특히 도내 외국인 인구는 2만5287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년 새 24%나 늘어났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11.6%)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백금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로이젠 창립 10주년 기념



참고대개방 미친데이 세일

결혼예복 특별세일 10만원대

9월 1일 ~

9월 30일

제주점 (삼도일동)

☎064-727-3330

